

문 1.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,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.
- ②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 방식을 채택하였다.
- ③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함을 강조하며,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.
- ④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,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.

문 2.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, 영국의 의회형을 예로 들 수 있다.
- ②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.
- ③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,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.
- ④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회·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.

문 3.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보건소 운영, 시·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이 많다.
- ②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 % 정도를 차지한다.
- ③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다.

문 4. 지방자치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.
- ②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·감독한다.

문 5.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,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.
- ②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.
- ③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④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.

문 6.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종류가 있다.
- ③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.
- ④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총액의 95 %를 반영한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②
- 단체자치는 독일·프랑스·일본, 주민자치는 미국 영국에서 발달
 - 선지③은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
 -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
2. ①
-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
 - 기관대립형에서 집행기관의 장은 선거로 선출
 - 미국의 위원회는 기관통합형, 독일의 참사회·이사회 기관통합형에 해당
3. ③
-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는 단체위임사무
 -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고,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 50~60%, 기관위임사무 30~40%, 단체 위임사무가 10% 정도를 차지함.
 -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비해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좁음.

정답 및 해설

4. ③
- 지방자치법 제39조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
 - 지방자치법 제27조: 조례위반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
 - 소방기본법 제3조 2항: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음.
5. ④
- 선지①, ②은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
 - 선지③은 비경합성의 원칙: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
6. ④
- 기준세율은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하고, 기준세율은 「지방세법」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함.

문 7.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법 은 주민투표의 대상, 청구요건,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.
- ② 지방자치법 상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③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.
- ④ 아른스타인(Arnstein)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(placation)는 비참여에 해당한다.

문 8.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- ②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.
- ③ 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④ 사무직원의 임용, 보수,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공무원법 을 적용한다.

문 9. 정부 간 관계에 관한 로즈(Rhodes)의 권력의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로 본다.
- ② 정책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
- ③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.
- ④ 지방정부는 법률적 자원, 정보 자원,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.

문 10.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.
- ②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하였으나, 201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.
-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.
- ④ 광역의회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.

문 11.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
- ② 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
- ③ 지방분권의 촉진
- ④ 행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

문 12.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,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③
- 주민투표에 관한 상세규정은 주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음.
 -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의 전심절차
 - 회유는 형식적참여에 해당
 - 아른슈타인이 분류한 주민참여
 - (1) 비참여: 조작 < 임시치료 또는 교정
 - (2) 형식적 참여: 정보제공 < 상담 또는 의견수렴 < 회유 또는 유화
 - (3) 주민권력적 참여: 대등협력 또는 동반자관계 < 권한위임 < 자주관리
8. ②
-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
9. ④
- 중앙정부 법적·재정자원, 지방정부는 정보·조직자원에서 우위

정답 및 해설

10. ④
- 기초·광역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, 단 교육감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허용안됨
 - 기초 지방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가 기본, 광역 지방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
 -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(일반 시·도의 경우 100분의 10)
11. ③
-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분권을 저해
12. ②
-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(다만, 주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할지 않을 수 있음)이고,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.

문 13.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,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.
- ②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다.
- ③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
- ④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문 14.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론 시·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시·군·자치구의회의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, 이때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.
- ④ 행정협의회는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
문 15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.
-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에 속한다.
-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시·군 조정교부금도 이전 재원의 예이다.
- ④ 시·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시·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②
·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7년부터 실시되었음.
14. ④
· 지방자치법 제153조: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
15. ③
· 국고보조금은 용도와 수행조건 등이 정해져 있음.
· 지방세기본법 제8조: 목적세는 시·도세
· 지방자치법 제127조: 광역지자체: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 / 광역의회: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
· 지방자치법 제127조: 기초지자체: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 / 기초의회: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

문 16. 사바스(Savas)가 제시하는 공공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유형 중 '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(A)'과 '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(B)'의 예로 옳은 것은?

-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 | B |
| ① 계약방식(contracting-out) 셀프 서비스(self service) | ① 계약방식(contracting-out) |
| ② 보조금 방식(granting) | ② 계약방식(contracting-out) |
| ③ 허가(franchises) | ③ 정부 간 협정 |
| ④ 이용권 지급(vouchers) | ④ 허가(franchises) |

문 17.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채 중 외채의 발행
- ㄴ. 시·도의 지방공사 설립
- ㄷ. 행정구의 명칭 변경과 읍·면·동의 구역 변경

- ① ㄱ
- ② ㄷ
- ③ ㄱ, ㄴ
- ④ ㄴ, ㄷ

문 18. 지방자치법 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도를 달리하는 시·군 및 자치구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이다.
-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,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정답 및 해설

16. ①
· 사바스의 공공서비스제공방식

		배열자	
		정부	민간
생산자	정부	· 정부서비스 · 정부간협약	· 정부 용찰(판매)
	민간	· 계약 · 프랜차이즈 · 보조금	· 바우처 · 시장 · 자원봉사 · 셀프서비스

17. ①
· 지방공기업법 제49조: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설립은 광역단체장과 협의, 광역단체의 지방공사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사항
· 지방자치법 제4조의2: 행정구의 명칭변경, 읍·면·동의 구역 변경은 조례로 정하고 시·도지사에게 보고
18. ①
· 지방자치법 제8장 1절
·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.
·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·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문 19.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수입연도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으며, 수입의 근거·종류·형태가 단순하다.
- ②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,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이다.
- ③ 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.
- ④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,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.

문 20.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.
- ㄴ. 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ㄷ. 국고보조사업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, 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
정답 및 해설

19. ④

- 세외수입은 수입의 근거·종류·형태가 다양함.
-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, 전자는 임시적 수입이고 후자는 경상적 수입
- 선지 ③은 분담금과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혼함
- 지방자치법 제136조~제138조
 - 사용료: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
 - 분담금: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
 - 수수료: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

20. ④

- 지방재정법 제27조의2: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